

尹 대통령 “노동·교육개혁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100개 기업 CEO초청 오찬 간담회
근로시간 선택권·유연화 법안에
MZ세대 의견청취·내용보완 지시
“일자리 창출 방해규제 타파하고
AI·바이오 등 미래기술 선제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14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통해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에 대해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날 오찬을 통해서 기업인들과 만나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라며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민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은 100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초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청해 오찬 겸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는 나라에서 재정으로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나온다는 것, 기업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강조했다”며 “우리 정부는 특히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기조를 강력히 천명하고 실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세금과 재정으로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를 타파하고,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게 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첨단 과학기술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

며 “이 역시 투자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창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개혁은, 기업에는 생산성과 경쟁력 증대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제대로 공급하고, 미래세대에게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지식과 경쟁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육개혁 역시 기업에는 투자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고, 미래세대에게는 이러한 기업 수요에 충

족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성장이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성장이고, 기업의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투자를 통해 일자리가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는 것이 바로 우리 경제의 성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과 원팀으로 수출 증진에 힘써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높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첨단 과학기술, 스타트업 그리고 새롭고 참신한 가치 창출을 만들어내는 스타트업의 육성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찬에는 지난해 일자리를 많이 만든 공로로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중소·중견·대기업 93개사(社)와 장애인일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기업 7개사 등 총 100개 기업이 참석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노조 10곳 중 3곳, 재정보고 거부 ‘과태료’

고용부, 내달 중순 현장조사 착수
조사 거부·방해해도 과태료 부과

노동조합 10곳 중 3곳이 정부에 재정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정부는 4월 중순부터 전국 노조 대상 현장 조사도 착수한다. 노조가 현장 조사 거부 또는 방해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가 86곳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15일부터 노조법 위반으로 해당 노조에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 노조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334곳 중 지난 2021년 이후 해산 신고된 15곳을 제외한 319곳이었다. 이 가운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노조는 86곳(26.9%)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증빙자료로 비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표지 1장과 장부

내용 중에 부담이 없는 속지 1장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 결과, 제출 시한까지 정부에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불과했다. 대다수 노조인 207곳(63.3%)은 표지만 제출하거나 자료 자체를 아예 내지 않았다.

이후, 고용부는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132곳에 시정기간 14일을 줬다.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233곳(73.1%)이었다. 나머지 86곳(26.9%)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점검 대상 64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곳은 23곳(37.1%)에 그쳤다. 한국노총도 178곳 중 141곳(79.1%)만 제출을 완료했다.

이는 양대노총이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시정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6곳 노조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할 계획이다.

오는 15일부터 5개 노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월 초까지 사전 통지를 끝낸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1면 ‘재정준칙 없는 나라’서 계속

“따라하기식 준칙 도입 정부 여당 논리 빈약”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정의 건전성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기술자라면 누구든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현금주의적인 재정준칙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교수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900조원 흑자인데, 왜 지금 연금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다른 나라의 비례 국가채무비율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위험하니까 안전장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안동

**안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 보유 최초 도시**

2010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마을'

2015년 10월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유교책판'

2018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병산서원'

2022년 11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국의 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